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본경선 출사표

“통합 완수 각오로 임할 것”

기호1번 신정훈 후보

본경선을 단순한 후보 경쟁이 아니라, ‘전남·광주 통합의 미래를 누가 책임 있게 완수할 것인가’를 가리는 무거운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진심으로, 더 치열하게,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본경선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전남·광주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누가 제대로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할 사람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통합을 말로만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남·광주 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설계했고 통합법 현실화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지역 통합의 길을 실제로 열어왔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양곡관리법을 만들고 농어촌기본소득의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에 맞서온 경험도 있습니다.

통합을 말만 하는 후보와 통합을 실제로 해본 후보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저는 통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저는 먼 미래의 약속만 앞세우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이 오늘 겪는 불편을 줄이고, 청년의 막막함을 바꾸고, 노동의 차별을 끝내는 정치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통합은 이름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시·도민의 삶을 바꾸고, 전남·광주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익숙한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통합특별시를 성공시킬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가장 잘 손을 맞추고, 통합의 방향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며, 끝까지 밀어붙여 결과를 만들 사람이 저 신정훈입니다.

민주당 본경선에서 전남·광주 통합의 길을 가장 책임 있게 완수할 후보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서는 그 역사적인 길, 저 신정훈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기호2번 민형배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지역 10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과정입니다. 전남·광주는 통합과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저 민형배가 그 길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정 호흡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께서 직접 저에게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광주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지원을 시민의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꿈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한 단어로 ‘힘’입니다. 서울에 휘둘리지 않는 힘, 시민이 스스로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우리 지역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힘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20조원 중 2조원을 인재 양성에 투자해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교육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으로 묶어 품격 있는 문화 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첨단 산업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자연과 기술, 삶과 여유가 어우러지는 녹색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의 3대 주권을 책임지겠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 주권을 세우고 풍요로운 들과 바다로 식량 주권을 뒷받침하며 가장 많은 섬과 긴 해안선으로 영토 주권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 그 중심에 전남·광주가 있습니다.

전남·광주의 서러운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기회가 마침내 왔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전남·광주 민형배. 민형배는 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

기호5번 김영록 후보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제 진정 통합의 뜻을 갖고 통합을 실천하며 통합시장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전남·광주가 하나돼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은 바로 저, 김영록입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월 2천500억원, 연 3조원, 4년 동안 12조원을 쓰겠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20조원 인센티브를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후보는 20조원 중 16조원을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법률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일 뿐입니다.

통합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자 말씀드렸습니다. 젊은이에게 꿈을 실현시켜 주고 취약계층, 자영업자, 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자는 뜻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8년간 66개월, 5년 반 동안 시·도지사 업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시·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묵은 숙원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합종연횡에 올바른 선택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누가 통합특별시장으로 제격인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십시오.

통합특별시의 앞으로 10년 후 미래를 위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우리 전남·광주에 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저, 김영록의 목표이고 5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그 실천입니다. 장대한 비전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해낼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미래상입니다. 꿈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와 실력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증됐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통합특별시장, 저 김영록, 오직 특별시민 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시·자치구 비상경제대응전담팀(TF) 회의’에 참석해 물가 안정, 유통질서 확립, 소상공인 및 수출입 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市, 비상경제TF 확대…민생안정 행정력 집중

합동 점검회의…물가·에너지 대응 강화

종량제봉투·석유 등 시장교란 차단 주력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중동상황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기 시행 등 전방위적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시·자치구 비상경제대응전담팀(TF)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유통질서 확립 ▲소상공인 및 수출입 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상반기에 추가 시행한다. 또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공공배달앱의 4월 할인 쿠폰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상황 여파로 자금난이 우려되는 1천여개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하고, 수출진흥자금 30억원을 이달 중 신속히 집행하는 등 총 1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선제 지원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광주시는 ‘비상경제대응TF’에 ‘취약계층지원팀’을 신설, 기존 1단 3팀에서 1단 4팀 체제로 확대 개편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유가 및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종량제봉투 사재기 등 시민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고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석유판매업소 가격 점검과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긴급 돌봄과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 위기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민생 안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변은진 기자

‘포장재 가격 급등’ 농식품기업 긴급지원

道, 1억4천만원 규모 10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2일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식품 제조기업을 위해 1억4천만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에틸렌 등 기초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해 산업용 포장재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20-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포장재 가격도 10% 이상 오르며 농식품 제조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포장재 원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재원은 기존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집행 잔액 1억4천만원(도비 50%·자부담 50%)을 활용한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탁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양시원 기자

강기정 캠프, 민형배측 ‘역선택 유도 의혹’ 고발

“조직적 여론조사 개입 정황 포착”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가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과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측의 ‘역선택 유도’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 예비후보 빛명캠프는 2일 오후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강기정·신정훈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 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빛명캠프는 해당 사안을 “조직적 여론조사 개입이자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빛명캠프에 따르면 민 후보 측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단일화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응답 결과를 캡처해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정황도 확인됐다는 게 빛명캠프의 주장이다.

빛명캠프는 “여론조사를 왜곡해 단일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개입”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빛명캠프는 “단순 참여자를 넘어 기획·지시·조직 운영 등 전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빛명캠프는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자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은진 기자

G20 정상회의 유치 연구용역 착수

전남도는 2일 “‘2028 G20 유치 기본구상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지난 2월11일 전남도가 G20 유치를 공식 선언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최고의 행사연출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티클모아와 함께한다.

전남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프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G20만큼은 지방 도시에서 치렀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만큼 정치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어, 이제 필요한 것은 설득력 있는 아젠다라고 판단, 민주와 에너지, 인권·평화, 케이(K)-컬처 등 5대 아젠다를 제시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남도일보 통합특별시장 ‘ARS 여론조사’] 보도 관련 알림·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26년 3월5일자 1면 및 3월4일자 홈페이지 2026 지방선거면 「통합특별시장 ‘ARS여론조사’ 신뢰도 의문」 제목으로 남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6년 2월21일-2월22일 양일 간 전남·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광주·전남 통합 기대효과’, ‘적합한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사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의 발언을 빌려, “①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이 현실화한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는 표본수가 적고 응답률도 극도로 낮아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지역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②해당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는 전남지역 응답자 수가 도시인 광주보다 1.83배 [1천510명(광주 533명, 전남 977명)]나 많게 집계됐는데 통상 여론조사의 경우 도시지역 응답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극히 이례적인 결과이고, 특정 후보만 전남 선호도가 직전 조사에 비해 6-10% 이상 급등하는 등 그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 ③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의 응답률이 도시 지역보다 낮지만 경선 관련 조사에서는 조직이 가동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지역별 응답자 수를 기록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유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남도일보 여론조사 등록 내역과 데이터 구조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소지는 없다. 남도일보 여론조사가 왜곡됐거나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남도일보 여론조사는 2026년 1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결과를 산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남도일보는 “①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통합 선거구로 분석하는 조사에서는 인구 비례에 따른 표본 설계와 가중치 적용이 일반적인 방식이며, 2026년 1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전남 인구(약 155만명)가 광주(약 119만명)보다 많기 때문에 남도일보 여론조사는 광주·전남 인구 비례에 맞춰 여심위 권고치 내의 적법한 가중치(광주 1.23, 전남 0.88)를 적용해 최종 결과물을 도출한 것이고, ② 남도일보 여론조사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무작위로 제공하는 ‘무선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100%’로 진행되어 전화기 착신 전환이나 조직적 표본 조작이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외부 개입이나 조직적 여론 조작 시도가 있었거나 실행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③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광역 단위 조사 기준 최소 표본은 800명인데 이를 2배 가량 상회하는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대표성 있고 신뢰할만한 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한 것이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